

 COMMENT

2020 국회8급 행정학은 7급수준 이상으로 디테일하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대거 출제되었습니다. 국회직 답게 법령문제도 다수 출제되어 9급 개론수준의 준비를 한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체감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행정학으로 준비한 수험생들에게는 극히 일부 문제(문6의 갈등관리)를 제외하고는 큰 어려움이 없이 다른 수험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득점이 가능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수업중에 지금까지는 만나왔지만 앞으로는 나올 수 있다는 경계지점 신경향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고, 또한 선행정학 교재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긴 지문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른 수험생들과 점수차별화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문4의 근평상 착오, 문7의 탄력근무제, 문9의 위임과 위탁의 차이, 문12의 결산일정, 문18의 공무원연금(퇴직수당), 문23의 지방재정(긴급재정관리단체), 문24의 국민참여예산제도 등이 바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번 국회8급을 경험삼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여 앞으로 다가올 국가7급과 지방7급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대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김중규 -

정부실패의 요인 중, 관료들이 자기 부서의 이익 혹은 자신의 사적 이익에 집착함으로써 공익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은?

- ① 비용과 수입의 분리
- ② 내부성
- ③ X-비효율
- ④ 파생적 외부효과
- ⑤ 분배적 불공평

정답 및 해설

답 ②

설문은 관료가 국민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적(사회적) 목표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부서의 이익, 즉 사적 목표에 집착하여 공익을 훼손하는 사례를 설명하는 것으로 내부성(internality)에 해당하는 정부실패 요인이다.

☑ ①③④⑤ [x] 모두 정부실패요인에는 해당하지만 위 설문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요인들이다.

☞ 정부실패 요인

- ① 내부성(사적 목표) : 관료가 공적 목표보다 사적 목표에 집착하는 현상
- ② 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규제나 유인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상
- ③ 비용과 수익의 절연 : 공공재는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현상
- ④ X-비효율 : 경쟁의 결여로 인하여 비용이 상승하는 현상
- ⑤ 권력의 편재에 의한 분배의 불공평 : 권력과 특혜에 분배가 왜곡되는 현상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 직무일수록,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안정적인 조직환경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진다.
- ② 조직구조의 구성요소 중 집권화란 조직 내에 존재하는 활동이 분화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 ③ 지나친 전문화는 조직구성원을 기계화하고 비인간화시키며, 조직구성원 간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
- ④ 공식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적응력은 떨어진다.
- ⑤ 유기적인 조직일수록 책임관계가 모호할 가능성이 크다.

정답 및 해설

답 ②

조직의 구조변수 중 집권화란 의사결정권이 상층부로 집중되어있는 현상을 말한다. 조직내에 존재하는 활동(업무)이 분화되어있는 정도는 집권성이 아니라 복잡성을 말한다. 복잡성은 분화의 정도(degree of differentiation)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이 수평적으로 얼마나 분화(분업)되어 있고, 수직적으로 얼마나 분화(계층화)되어 있으며, 장소(지역)적으로 얼마나 널리 흩어져 있는가를 의미한다.

- ☑ ① [o] 단순한 직무일수록, 규모가 클수록, 안정된 환경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진다.
- ③ [o] 지나친 전문화(분업)는 구성원을 기계부품화 내지는 비인간화시키고 조정을 어렵게 만든다.
- ④ [o] 공식화란 업무의 표준화정도를 말하는데 공식화는 안정된 환경에서는 비용 절감, 행정의 일관성 확보 등 유익하지만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탄력적 대응성이 저하된다.
- ⑤ [o] 유기적 구조는 기계적 구조에 비하여 엄격한 분업이나 계층화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수평적·수직적으로 역할이나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 조직 구조변수간 관계

구분	규모	기술(일상)	환경(불확실)
복잡성	+	-	-
공식성	+	+	-
집권성	-	+	-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 ②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③ 기관장은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 ④ 기관장은 전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 ⑤ 계급별 정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답 ③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직내외에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5년 범위내에서 최소한 2년 이상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 ① [×]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된다.
- ② [×] 기본운영규정은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니라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 ④ [×]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책임운영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은 중앙행정기관장이 가진다.
- ⑤ [×]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모두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통제와 자율

구분	대통령 등 중앙차원의 통제	소속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자율	책임운영기관 차원의 자율
조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행안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설치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이 설치 요구
	소속기관의 설치	대통령령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		기본운영규정
정원	총정원	대통령령	
	종류별·계급별 정원		부령 또는 총리령
	직급별 정원		기본운영규정
인사	직원 임용권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관장에게 일부 위임
	채용시험 실시권		기관장
예산	예산지침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이 의견 제시 가능
	특별회계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 관리	
	특별회계 운용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이 계정별로 운용
성과	존속여부 평가 등	행안부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성과평가 (1차) 등		각 부처 책임운영기관운영협의회

연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임용)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성과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기본운영규정)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8조(임용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정원)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 1.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
-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평정상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쇄적 착오(halo error)란 모호한 상황에 관해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판단을 내리게 되는 데서 범하는 착오이다.
- ② 일관적 착오(systematic error)란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다른 평정자보다 높거나 낮아 다른 평정자들보다 항상 박한 점수를 주거나, 후한 점수를 줄 때 발생하는 착오이다.
- ③ 유사성의 착오(stereotyping)란 평정자가 자신의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하거나, 정보를 고정관념에 부합되도록 왜곡시킬 때 발생하는 착오이다.
- ④ 근본적 귀속의 착오(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란 평정자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그들이 속한 집단 또는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에 비추어 지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착오이다.
- ⑤ 이기적 착오(self-serving bias)란 타인의 실패·성공을 평가할 때 상황적 요인은 과소평가하고 개인적 요인은 과대평가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 발생하는 착오이다.

정답 및 해설

답 ②

일관된 착오(규칙적 착오)를 옳게 설명하고 있다. 규칙적(일관적)오차란 한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일관적·지속적으로 과대 또는 과소평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인의 가치관이나 평정기준에 의하여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오차이다. 반대로 총계적 오차란 동일한 피평정자에 대해 경우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즉 일관성이 없는 불규칙적인 오류로서 실제평점과 평균치간의 차이의 총계를 의미한다.

- ☑ ① [×] 연쇄적 착오가 아니라 선택적 지각의 착오이다.
- ③ [×] 유사성의 착오가 아니라 방어적 지각의 착오이다.
- ④ [×] 근본적 귀속의 착오가 아니라 상동적 오류에 해당한다.
- ⑤ [×] 근본적 귀속의 착오란 이기적 착오와 연관된 것으로 타인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 요인을 높게 평가, 개인적 요인은 낮게 평가하고,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반대로 상황적 요인을 낮게, 개인적 요인을 높게 평가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 근무성적평정상 착오

연쇄효과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나 전반적인(막연한)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착오
시간적 오차	최근의 실적·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근접 오류
집중화의 오차	무난하게 중간으로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
관대화의 오차	실제보다 너그럽게 후한 평정을 하는 것
규칙적 오차	일관된 평정기준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과대 or 과소평정 하는 것
총계적 오차	불규칙적인 오류
논리적 오차	평정요소 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한 오류
상동적 오차 (stereotyping)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로 선입견·고정관념에 의한 오차
피그말리온효과	예언한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게 되는 자기충족적 예언효과
대비오류	평정대상자를 바로 직전의 피평정자와 비교하여 평정
유사오차	평정자가 자기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
선택적 지각 착오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판단을 내리는 것
방어적 지각 착오	자신의 습성이나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하거나 왜곡시키는 방어적 회피
이기적 착오	타인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개인적 요인을 낮게 평가하고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 요인을 낮게 평가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형으로 옳은 것은?

〈보기〉

이 모형은 한 조직, 특히 공공조직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이 조직문화를 단일 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갖게 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중 차원적 접근방법 중 하나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조직문화의 유형은 두 가지 차원, 즉 내부 대 외부, 그리고 통제성 대 유연성을 기준으로 인간관계모형, 개발체제모형, 내부과정모형, 그리고 합리적 목표모형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 ① 조직문화창조모형 ② 갈등·협상모형
- ③ 혼합주사모형 ④ 경쟁가치모형
- ⑤ 하위정부모형

정답 및 해설

답 ④

제시문은 조직문화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경쟁적 가치모형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Quinn & Rohrbaugh(1983)는 '어떤 조직이 효과적인가'하는 것은 대립되는 다양한 가치판단에 달려있다고 지적하고 상충되는(양립될 수 없는) 가치에 의한 통합적 분석틀에 입각하여 경쟁적 가치모형을 완성시켰다.

①②③⑤ [x] 모두 제시문과는 관계 없는 모형들이다.

Quinn & Rohrbaugh의 경쟁적 가치모형

가치	조직(외부)	인간(내부)
통제	[합리목표모형] - 합리문화 ① 목적: 생산성, 능률성 ② 수단: 기획, 목표설정, 합리적 통제	[내부과정모형] - 위계문화 ① 목적: 안정성, 통제와 감독 ② 수단: 정보관리, 의사소통
유연성	[개방체제모형] - 발전문화 ① 목적: 성장, 자원획득, 환경 적응 ② 수단: 유연성, 용이함	[인간관계모형] - 집단문화 ① 목적: 인적자원 발달, 팀워크, 능력 발휘, 구성원 만족 ② 수단: 응집력, 사기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갈등은 해결과정에서 조직의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융통성 등이 향상되는 순기능도 있다.
- ② 관계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전달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 ③ 직무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자원 증대, 공식적 권한을 가진 상사의 명령 및 중재, 그리고 상호타협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④ 과정갈등은 상호 의사소통 증진이나 조직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 ⑤ 갈등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부서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답 ③

Timothy & Judge는 갈등의 대상을 기준으로 갈등을 업무의 내용과 목표에 관련된 과업(직무)갈등(task conflict), 대인관계에 관련된 관계갈등(relationship conflict), 그리고 업무수행방법에 관련된 과정갈등(process conflict)으로 구분하였다. 과업갈등(직무갈등)이란 업무의 내용이나 목표에 관련된 갈등으로 업무간 상호의존성이나 지나친 분업, 목표간 차이 등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다. 따라서 업무의존성(접촉필요성)을 줄여주거나 상위목표의 제시, 계층제적 권위 등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다.

- ① [o] 갈등은 해결과정에서 조직의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융통성, 적응력의 향상 및 조직발전 등의 순기능도 있다.
- ② [o] 관계갈등은 대인관계의 악화로 인한 갈등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전달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직원들 간 소통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 ④ [o] 과정갈등은 업무수행방법에 관련된 갈등이므로 상호 의사소통 증진이나 조직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 ⑤ [o] 소모적 갈등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부서 간 적대감이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예규」상 탄력근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재택근무형
- ② 시차출퇴근형
- ③ 재량근무형
- ④ 근무시간 선택형
- ⑤ 집약근무형

주요선택

이 문제의 방점은 「인사혁신처 예규」입니다.

정답 및 해설

답 ①

재택근무형은 탄력근무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연근무제의 구분기준은 다양한데 설문은 인사혁신처예규상 탄력근무제를 묻은 것이므로 ②③④⑥만 해당한다. 재택근무형은 원격근무제에 속한다. 탄력근무제는 근무장소보다는 출퇴근시간이나 일일근무시간 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유연근무제를 말한다.

☑ ②③④⑤ [○] 모두 인사혁신처예규상 탄력근무제에 포함된다.

유연근무제의 종류(인사혁신처 예규)

시간선택제 근무제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주 15~35시간 근무하고 근무 시간비율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신분을 보장받는 정규직 공무원
탄력 근무제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 범위안에서 필수근무시간대(10:00~16:00)를 제외하고는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10시~19시 등)
	근무시간선택형	1일 근무시간(4~12+)을 조정하되, 주5일 40시간 근무 유지
	집약(압축)근무형	1일 근무시간(10~12+)을 조정하여 주 40시간 근무를 주 3.5~4일로 압축하여 근무
	재량근무형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근무 인정
원격 근무제	재택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가정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업무처리 및 결제
	스마트워크근무형	사무실이나 집이 아닌 주거지 근처 원격근무사무실(smart office)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사무처리

* 탄력근무제가 시간적 유연근무제라면, 원격근무제는 장소적 유연근무제에 해당한다.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갈등의 유형(Timothy & Judge)

유형	개념	원인	해소방안
직무 갈등	업무(직무)의 내용이나 목표에 관련된 갈등	과업(직무)요인(지나친 분업, 업무의존성)	① 상위목표 제시 ② 계층제적 권위 이용 ③ 접촉필요성 감소
관계 갈등	대인관계에 관련된 갈등	인적 요인(가치관, 문화, 소통 부족 등)	① 의사전달 장애요소 제거 ② 의사소통 기회 제공
과정 갈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관련된 갈등	구조적 요인(자원 부족, 할거주의 등)	① 의사소통 증진 ② 조직구조의 변경 ③ 자원의 증대

정부 간 관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라이트(Wright)의 이론 중 중첩권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유형을 말하며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 ② 던사이어(Dunsire)의 이론 중 하향식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형을 말한다.
- ③ 엘코크(Elcock)의 이론 중 동반자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감독 및 지원 하에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을 말한다.
- ④ 윌다브스키(Wildavsky)의 이론 중 갈등-합의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인사와 재정상으로 완전하게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을 말한다.
- ⑤ 무라마츠 미치오(村松岐夫)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수직적 통제모형과 수평적 경쟁모형으로 나눈다.

정답 및 해설

답 ③

Elcock의 동반자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는 분리·독립된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는 관계로 D.Wright가 제시한 분리권위형과 유사한 모형을 말한다.

☑ ①②④⑤ [○] 모두 학자들의 IGR모형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 정부간 관계(IGR) 모형

학자	모형		
D.Wright	분리권위형	포괄권위형	중첩권위형
Elcock	동반자모형	대리자모형	교환모형
Kingdon			소직인모형
Nice	경쟁형(대립형)		상호의존형
Muramatsu	수평적경쟁모형	수직적통제모형	
Rhodes	동반자모형	대리인모형	전략적협상형
Dunsire	지방자치모델	하향식모델	정치체제모델
Wildavsky	갈등-합의모형	협조-강제모형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회조정위원회를 둔다.
- ⑤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사무 처리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된다.

2. 공무원법

*위탁*과 *위임*은 다릅니다.

정답 및 해설

답 ①

위임과 위탁은 다르다. 위임은 하급기관나 소속기관에 하향적으로 위임하는 것이고, 위탁은 동일수준의 행정기관, 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수평적 위임이다. 따라서 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야 옳다.

- ☑ ② [○] 공동처리방식인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③ [○] 전국적 협의체 설립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④ [○] 중앙과 지방간 분쟁조정절차와 기구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⑤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격을 갖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므로 조합의 사무처리효과는 당연히 당해 조합에 귀속된다.

연구

지방자치법 제151조(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이관, 위임, 위탁의 차이

이관(이양)	완전히(일체) 이관, 감독책임 남아있지 않음		
위임, 위탁	일부위임(일부위탁), 감독책임 남아있음	위임	수직적(하향적) 위임
		위탁	수평적 위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답 ①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이다.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이다.

②③④⑤ [○] 모두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옳은 지문이다.

연구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을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11

중요도  난이도 

2020 국회8급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 예산을 본예산 혹은 당초예산이라고 한다.
- ② 준예산 제도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 ③ 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은 그 유효기간이나 지출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본예산에 흡수된다.
- ④ 적자예산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국채발행, 한국은행으로 부터의 차입, 해외차입 등으로 보전한다.
- ⑤ 수정예산은 예상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한 때 본예산에 수정을 가한 예산이다.

정답 및 해설

답 ⑤

예산 성립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할 때 본예산과 별도로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은 수정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이다. 수정예산은 예산이 제출된 후 성립되기 이전에 본예산에 수정을 가하는 예산이다.

- ① [○] 본예산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② [○] 준예산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③ [○] 본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은 그 유효기간이나 지출잔액 유무에 관계 없이 본예산에 흡수된다(2020.1~2월 압축강의 모의고사와 유사한 지문).
- ④ [○] 재정적자시 자원보전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이다.

 예산성립시기별 예산의 종류

본예산	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확정한 당초 예산
수정예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한 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에 여간변화로 본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편성·제출한 예산
추가경정 예산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가·변경된 예산
준예산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의회승인 없이 특정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12

중요도  난이도 

2020 국회8급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사무총장은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국회사무총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⑤ 정부의 세입·세출에 대한 출납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답 ③

중앙관서의 장(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 포함)은 「국가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5월 말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 ④ [○] 모두 예산안 첨부서류들로 맞는 지문이다.
- ⑤ [○] 출납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이다. 세입·세출에 관한 출납사무는 다음 연도 2.10까지 완결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수취 정정이 불가능하다.

정책평가과정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들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보다 정책의 효과가 과대평가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은?

- ① 선정효과
- ② 회귀효과
- ③ 오염효과
- ④ 크리밍 효과(creaming effect)
- ⑤ 대표효과

정답 및 해설 답 ④

설문은 정책평가의 외적타당도를 저해하는 크리밍효과에 해당한다. 크리밍 효과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양호한 사람들만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하여 정책효과를 크게 나타내게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로 그런 평가결과는 내적타당도를 저하시키지만 일반화시키기도 어렵게 된다.

- ①②③ [x] 모두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으로 설문과는 관계없는 요인들이다.
- ⑤ [x]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이지만 설문과는 관계없는 요인이다. 실험대상의 대표성이 부족하여 실험결과를 일반화시키지 못하는 현상이다.

정답평가의 타당도 저해요인

내적 타당도	선발효과	집단을 구성할 때 선발의 차이로 인한 오류
	역사적요인	실험기간 동안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오류(사건효과)
	성숙효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 성장에 의한 오류(성장효과)
	상실요소	두 집단 간 구성상의 변화(탈락, 이탈)로 인한 오류
	측정요소	사전에 측정(테스트)한 사실 자체가 사후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현상(시험요인)
	측정도구변화	측정도구의 일관성(신뢰도) 결여로 인해 내적 타당성이 저하
외적 타당도	회귀인공요소	실험직전 단 한번 측정된 극단치에 의한 오류(실험직전반응효과)
	오염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모방이나 누출현상
	호오둔효과	인위적으로 통제된 실험결과의 일반화 곤란(실험조작반응효과)
	다수처리간섭	여러 차례의 실험조직에 익숙해져서 일반화 곤란
	대표성부족	집단의 사회적 대표성 부족으로 인한 일반화 곤란
	크리밍효과	효과가 크게 나타날 양호한 사람들만 실험집단에 배치하는 현상

근대관료제의 특징과 병리

특징	병리
① 분업과 계층제, 집권화	① 민주성·대표성 제약
② 법 앞의 평등: 법규에 의한 행정	② 동조과잉(목표 전환)
③ 문서주의	③ 번문옥례: red tape
④ 공·사 분리	④ 인격 상실: 인간의 성장 저해
⑤ 전문지식에 의한 채용(실적관료제)	⑤ 전문가적 무능: 한 가지 일에만 길들여짐
⑥ 전임직(직업관료제): 연공서열에 따른 보수와 승진	⑥ 할거주의(국지주의): 소속집단에의 이익에만 집착
⑦ 비개인화(impersonalism): 감정·편견의 배제	⑦ 변동에 대한 저항: 보수성
	⑧ 독선주의, 기밀주의: 국민에 대한 무책임성
	⑨ 피터의 원리: 무능력수준까지 승진
	⑩ 능력과 지위의 부조화: 이원적 권력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 ② 상·하수도 설치 및 관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소비자보호 및 저축장려는 기관위임사무이다.
- ③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수입주체가 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때는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 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답 ④

④만 옳은 지문이다. 기관위임사무란 개별법령의 근거 없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법령의 근거가 없이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① [×]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 모두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속한다.
- ③ [×]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위임받는 사무는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단체위임사무이다.
- ⑤ [×] 기관위임사무는 지방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의회가 지휘하거나 관여할 바가 못된다.

연구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비교

구분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중앙의 감독	적극적(교정+예방)	소극적(교정)
지방의회의 관여	불가	가능
경비부담	국가(위탁금)	지방 및 국가(부담금)
이해관계	국가	국가 및 지방
개별법적 근거	불요 (직권위임)	필요 (법정위임)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009년 이전까지는 지방재정이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지방재정의 일반회계, 기금, 교육 특별회계까지 모두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된다.
- ② 통합재정수지를 통해 국가재정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예산운용의 신속성이 제고되었다.
- ③ 통합재정수지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는 제외된다.
- ④ 통합재정수지는 정부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영역별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정부 예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답 ⑤

통합예산(통합재정)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모두 포함(총망라)하여 정부의 예산규모와 재정활동을 정확하고도 체계적으로 분류·파악하려는 예산이다.

- ① [×] 2009년이 아니라 2004년이라고 맞대(이 지문은 2020 7급 선행 정학 기본서 p.634 날개 지문을 연도만 바꾸어 그대로 출제한 케이스이다).
- ② [×] 통합재정은 신속성을 제고시키려는 제도가 아니라 통제와 관심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키려는 재정통제 강화수단이다.
- ③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은 포함되고 금융성기금(신용보증기금 등)은 제외된다.
- ④ [×] 통합예산은 정부의 실제활동영역별 예산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법정예산이나 집행용 예산이 아니라 정부전체의 월별 재정수지를 알려주는 단순한 재정통계이다.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사무총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회입법조사처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자정부기본계획에는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전자정부의 국제협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국회예산처장은 민원인이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가 행정기관 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 민원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냈을 때에만,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⑤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답 ⑤

⑤는 “정보기술아키텍처”가 아니라 “정보시스템”의 개념에 해당한다.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는 정보시스템이고,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전자정부법」 제2조)

- ①②③④ [○] 모두 「전자정부법」상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역할 등에 대하여 옳게 설명하고 있는 맞는 지문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연금제도의 주무부처는 인사혁신처이며, 공무원 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한다.
- ② 공무원연금제도는 기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③ 공무원연금제도는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④ 기여금을 부담하는 재직기간은 최대 36년까지이다.
- ⑤ 퇴직수당은 공무원과 정부가 분담한다.

주요 개념

퇴직수당은 퇴직연금이 아닙니다.

정답 및 해설

답 ⑤

퇴직수당은 퇴직연금과 달리 재원을 정부가 단독 부담한다(수업 때 수차 주의를 당부했던 내용으로 2020 선행정책 기본서 p.568에도 명시되어 있다).

- ① [○] 공무원연금제도는 중앙인사행정기관인 인사혁신처가 관장하고, 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운용한다.
- ②③ [○]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자원조성방식이 기금제이자 기여제이다.
- ④ [○] 기여금 납부기한은 최대 36년까지이다. 종래 33년에서 2016 연금개혁 시 36년으로 연장되었다.

공무원연금 자원 조성방식

방식	개념	국가	
적립 여부	적립방식	장래에 소요될 급여비용 부담액을 가입기간동안 평균화된 보험료로 미리 적립하는 방식	한국, 미국
	부과방식	미리 재원을 적립하지 않고 급여를 지불할 때마다 비용을 정부 또는 가입자로부터 각출	영국, 독일, 프랑스
기금 여부	기금제	소요재원을 미리 확보한 후 기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한국, 미국
	비기금제	소요재원을 미리 조성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자원만을 조달하여 지급하는 방식	영국, 독일, 프랑스
기여 여부	기여제	연금자원 조성을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	한국, 미국
	비기여제	연금자원 조성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	영국, 독일

정보화 관련 용어 정리(전자정부법 제2조)

행정정보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
정보기술 아키텍처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정보시스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
정보자원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버만(Berman)의 적응적 집행이란 명확한 정책목표에 의거하여 다수의 참여자들이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정책을 수정하고 구체화하면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엘모어(Elmore)의 전방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자가 집행과정과 정책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가정한 반면, 후방향적 접근법은 그렇지 않다고 가정한다.
- ③ 하향식 접근방법에서는 공식적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 받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 ④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 재량적 실험가형은 정책집행자들이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주도한다고 본다.
- ⑤ 엘모어(Elmore)는 통합모형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설계단계에서는 하향적으로 정책목표를 결정하고, 정책수단을 강구할 때에는 상향적 접근법을 수용하여 가장 집행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및 해설

답 ⑤

Elmore의 통합모형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Elmore는 처음에 상향식 집행(후향적 집행)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통합모형을 주장하였는데 그는 통합모형에서 정책목표는 하향적으로 설계하고, 정책수단은 상향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2020 7급 선행정학 기본서 p.280 Elmore의 통합모형 설명지문을 그대로 옮긴 표현이다).

- ① [×] Berman의 적응적 집행은 일종의 상향적 집행으로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② [×]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Elmore의 전방향 집행은 결정자가 정책과정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가정한다기보다는 집행연구 자체가 집행현장 파악이 아닌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 ③ [×] 하향식 집행이 아니라 상향식 집행에 대한 설명이다.
- ④ [×] 재량적 실험가형이 아니라 관료적 기업가형에 대한 설명이다.

하향적 집행과 상향적 집행

구분 \ 유형	하향적 · 집권적 집행 (top-down)	상향적 · 분권적 집행 (bottom-up)
정책상황	안정적 · 구조적	유동적 · 동태적
정책목표 수정	목표가 명확하여 수정 필요성 적음	수정 필요성 높음
결정과 집행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이원론)	정책결정과 집행의 통합(일원론)
집행재량	재량 불인정	재량권 인정
정책평가의 기준	집행의 충실성	환경에의 적응성
성공요건	결정자의 리더십	집행자의 재량권
핵심적 법률	있음	없음
Berman	정형적(거시적 · 하향적)집행	적응적(미시적 · 상향적)집행
Elmore	전방향 집행	후방향 집행
방향과 흐름	집권적, 기계적, 단계적(선형적), 연역적, 규범적	분권적, 역동적, 비단계적(융합적 · 기역적), 귀납적, 실증적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3 규/법/입

보조금과 교부세를 바꾼 함정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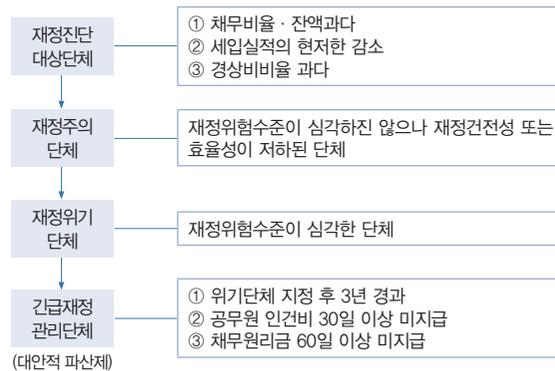
정답 및 해설

답 ③

국가가 정책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교부금이 아니라 보조금이다.

- ☑ ①②④ [○] 모두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맞는 지문이다.
- ⑤ [○] 사실상 지방파산제에 해당하는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으로 맞는 지문이다.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상환기일이 도래된 채무의 원리금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거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지 3년이 경과했음에도 재정위험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수업때 수차 강조했으며 2020 선행정학 기본서 p.802에 그대로 표현된 지문이다).

☑ 자치단체 재정위기 관리절차



연구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험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2.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3.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이자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 못한 경우

우리나라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9년도 예산편성부터 시행되었다.
- ㄴ.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각 부처는 소관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 ㄷ.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ㄹ.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및 해설

답 ①

- ㄱ, ㄴ만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이어 중앙정부도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수업때 수차 강조한 내용).
- ㄱ [○] 중앙정부 예산편성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8.3 시행되면서 2019 예산부터 처음 적용되었다.
- ㄴ [○]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절차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ㄷ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ㄹ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산 재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난구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 ③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이나 문화재 복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 ④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것이다.
- ⑤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답 ④

1994년에 도입된 총사업비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① [×] 재배정이 아니라 배정에 대한 설명이다. 재배정은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하부기관으로 다시 배정하는 것이다.
- ② [×]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비목으로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 ③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국가재정법」 제38조).
- ⑤ [×]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시행령 제44조).

연구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 ①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국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